

# 사상초유 ‘법관탄핵’ 도마위 오르나… 오늘 법관대표회의

### 행정처 업무이관 등 8개 안건

### 대법원 ‘특별재판부’에 위헌 소지 ‘박병대 전대법관’ 피의자 신분 소환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법관 탄핵’ 문제를 도마위에 올릴 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행정처 업무이관 등 8개 안건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최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제안하고 대법원 후속추진단이 발표한 사법행정 개편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후속추진단은 대법원장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는 협의체인 ‘사법행정회의’를 제안했다. 전제는 법원행정처 폐지다.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는 협의체 위원에 외부인사가 포함되는 데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사법농단 해결 촉구 열서 6,550장 국회 전달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적폐법관 파면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의에서는 형사사건 사무 분담과 사건 배당 논의도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특별재판부’가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대법원은 특별재판부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표판사인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도 지난 15일 국회에서 “법대 1학년 상식 수준이 특별법원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번 회의 최대 화두는 사법농단 관련 ‘법관 탄핵’ 논의 여부다. 같은날 오전 사법농단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소환된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끈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소속 판사 6명은 지난 12일 대구지법 법관대표 3명

에게 법관 탄핵 논의에 관한 내용이 담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의안 발의 제안’이라는 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안은 기한 내에 발의되지 않아 법관회의 정식 안건에 채택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건은 현장에서 10인 이상의 동의로 의장에게 요구해 상정할 수 있다. 법관 탄핵에 대한 공식 논의 가능성이 남은 것이다. 다만 탄핵을 둘러싼 법원 내부의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아, 탄핵 안건이 상정돼도 격론으로 흐를 수 있다. 특히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데다 기소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법관 탄핵 논의는 시기상조 아니냐는 반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법부 신뢰 회복 차원에서 법원의 자정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 역시 대표판사 사이에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 탄핵 촉구 결의안이 가결될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발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헌법에 따르면, 판사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탄핵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탄핵심판 청구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 정보으로 같은 한다. 파면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결정된다.

우리나라 재판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사례는 아직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실에 따르면, 한국은 과거 유대환 전 대법원장과 신영철 전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뿐,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되지는 않았다.

한편 일본 법관의 탄핵소추는 2013년까지 9건 있었고, 재판관 7명이 탄핵됐다. 2012년 전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차마 밑을 촬영한 일본의 한 판사는 같은 해 11월 탄핵소추가 결정돼 2013년 4월 10일 파면됐다. 반면, 지난해 7월 서울동부지법 홍도 판사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지만 감봉 4개월 징계에 그쳤다. /이법종 기자 joker@metrosoo.co.kr

## 中 수출 의약품 통관검사 쉬워진다

### 산업부, WTO TBT 정례회의

### 최초 수출시에만 검사… 이후 면제 15개국과 해외기술규제 30건 협의

앞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의약품은 통관검사를 처음에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15개국과 30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의 결과 중국, 인도 등 9개국의 해외 기술규제 14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에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사이버 보안과의

약품 규제에 대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함께 지속해서 이의를 제기해 3건의 독소 조항을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화학의약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최초로 수입할 때에만 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면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화학의약품 수입할 때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해 통관에만 2~4주가 걸리는 등 우리 제약업계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중국은 또 은행, 통신회사, 병원 등 주요 시설의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사업에 외국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던 규정(정보보안보호등급)을 철회해 우리 정보시스템 기업의 해당 사업 진출이 가능해졌다.

인도는 50MW(메가와트)급 이하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2020년 4월까지 우리나라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하고, 태양광 모듈에 적용하는 시험기준을 덜 복잡한 국제표준에 맞추기로 했다.

미국은 낙뢰보호시스템 설치와 관련한 화재보험협회 단체표준에 우리 중소기업이 요구한 기술방식을 반영해 향후 우리 기업이 미국 건물에 낙뢰보호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EU, 케냐,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에너지효율과 환경규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외국 규제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할 방침이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 중국·인도 등 9개국과 규제 해소 협의

### 산업부, “中 사업기회 확대 계기”

정부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중국·인도 등 9개국과 기술규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15일 제네바에서 진행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해외 기술규제 30건에 대해 15개국과 양자 협의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5건의 규제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회의에서 공식 안건(STC)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공식안건에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사이버보안법) ▲의료기기 국제공인시험성적서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수입식품 첨부증서 ▲이스라엘의 화장품 규제 등이다.

정부는 중국과 인도 등 9개국과 규제 애로사항 14건에 대해 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 합의를 끌어냈다. 중국의 사이버(정보)보안과 의약품 분야 규제는 미국, E

U, 일본 등과 지속적인 이의를 제기해 독소조항 철회 또는 절차 개선(3건)을 이끌어냈다.

산업부는 중국이 은행과 통신회사, 병원 등 주요 시설의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사업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던 규정(정보보안보호등급)을 철회해, 국내 정보시스템 기업들이 중국 사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강제화되는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국외 전송 금지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정해, 규제당국의 자의적인 개입에 따른 사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거북이걸음이란 약품 수출 문제도 해결됐다.

중국은 수입 화학의약품에 대해 최초 수입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통관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통관할 때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해, 통관에만 2~4주가 소요

됐다. 앞서 식약처는 2014년부터 중국에 통관절차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번 검사면제 결정으로 통관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 밖에 ▲인도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에어컨 품질인증에 대한 규제를 개정(3건)하고 ▲미국은 화재보험협회의 단체표준에 한국 중소기업 기술방식을 반영하고 ▲유럽연합(EU)은 전자디스플레이 및 냉장고 관련 친환경디자인(eco design) 규제의 부품 용접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케냐는 에어컨 에너지효율 시험 요건을 완화하고 ▲이집트는 진공 청소기에 붙이는 에너지라벨 크기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아랍에미리트(UAE)는 가전제품에 인쇄 방식으로 인증 라벨을 표시하는 방식에서 스티커 형태로 붙이기를 허용하고 ▲콜롬비아는 2019년 2월 시행 예정이던 폐전자제품 수거 의무화 규제의 시행을 유예하고 ▲필리핀은 인증(PS 라이선스) 취득 제품을 중복검사하는 통관검사 규제를 연기하고, 규제 내용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법종 기자



### 유류세 인하 영향, 휘발유 가격 하락세

유류세 인하 영향, 휘발유 가격 하락세

1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류세 인하 12일차인 지난 17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당 1556.8원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유류세 인하 시행 직전인 지난 5일의 1690.3원보다 133.5원 낮은 가격이다. /연합뉴스

## 중견기업 인식 제고, 우수기업인 격려

### 산업부-중견기업연합회 ‘2018 중견기업 주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19일 롯데호텔에서 ‘2018년 중견기업 주간’을 개최한다.

2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우수 중견기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중견기업계는 지난해 7월 중견기업 업무의 산업부 이관을 계기로, 중견기업계 사기 제고와 중견기업 인식 확산을 위해 중견기업 주간 신설을 건의해왔다.

이에 산업부는 매년 11월 셋째 주를 중견기업 주간으로 정하고, 올해 첫 번째 행사를 열어 중견기업계와의 ▲소통과 격려 ▲혁신과 일자리 ▲성장과 활력의 장(場)을 마련한다.

먼저 19일 오후 3시에는 우수 중견기업을 격려하는 ‘제4회 중견기업인의 날’과 ‘중견기업 Young CEO 포럼’이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승일 산업부 차관, 강호갑 중견기업 회장 등 중견기업 CEO·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우수 중견기업인을 포상한다.

같은날 오후 4시 10분 열리는 중견기업

Young CEO 포럼에는 정승일 산업부 차관, 강호갑 중견기업 회장을 비롯한 중견기업 2세 CEO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포럼에서는 기업이 정신과 차세대 리더의 역할, 중견기업 변화와 혁신 성공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코엑스에서 ‘리딩 코리아, 잡 페스티벌(Leading Korea, Job Festival)’도 열린다. 우수 인재와 기업 간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강소·중견기업 103개사, 청년 구직자 5000여명이 참석한다. 채용 상담과 면접, 일자리·수출 등 우수 강소·중견기업들에 대한 포상도 이어진다.

다음날인 20일에는 롯데호텔에서 ‘중견기업 혁신 국제컨퍼런스’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유영철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김학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과 국내외 전문가 16명, 중견기업 CEO와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혁신성장을 통한 중견기업의 세계적 기업화’ 방안을 모색한다.

21일 오전 7시에는 프라자호텔에서 ‘중견기업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이 열린다. 유관기관과 중견기업 혁신성장 협력 MOU 체결, 중견기업의 중견기업 지원사업과 우리은행의 중견기업 금융지원 계획(3조원 규모)이 발표된다. /이법종 기자